

'12·3 사태' 이후, MBC 뉴스를 돌아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내란 사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은 군함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헌법은 철저히 유린됐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총을 쏘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돼도 다시 계엄령을 내리면 된다"라며, 국헌 문란을 자행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파괴 행위는 지난 두 달 동안 속속들이 확인됐다. 윤석열 본인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법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그를 불법 계엄, 내란의 우두머리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한줄 한줄은 내란 세력의 충격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지난 두 달여, MBC 뉴스룸 구성원들은 말 그대로 고군분투했다. 기계적 중립, 따옴표 저널리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또 파헤쳤다. 시민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했다. 뉴스데스크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로 올라섰다. 민실위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취재와 제작 현장 일선에서 온 힘을 쏟으며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낸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보고서는 그 노고를 부정함이 아니다. 뉴스룸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가 짚어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이다. 결과론적 지적일 수 있겠지만, MBC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준비돼 있어야 하고, 활발한 토론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부실했던 뉴스특보... 신속성·내용 모두 문제

이번 내란 사태 보도에서 뉴스룸의 가장 뼈아팠던 실책은 무엇보다 늦어도 너무 늦었던 '비상계엄 특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생중계하지 못한 것은 물론, 특보가 시작된 시점 역시 담화가 시작되고 25분 뒤였다. KBS와 JTBC보다 25분, SBS보다 19분 늦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어느 뉴스보다 촌각을 다투 신속하게 전했어야 할 뉴스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포고령 전달도 늦었다. 23시를 기해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우리 특보는 23시 37분에서야 시청자들에게 처음 전달했다. 23시 27분 전후로 포고령을 전한 SBS와 JTBC에 비해 10분 가까이 늦었고, 30분에 속보를 전한 KBS에도 못 미쳤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가 처음 앉은 시각도 23시 12분으로, 22시 30분이었던 SBS와 22시 50분이었던 JTBC, 23시 8분이었던 KBS에 비해 늦었다. 국회 현장 중계차 연결도 KBS는 23시 20분, SBS 24시 3분, JTBC 23시 51분이었던 반면, 우리는 24시 20분에서야 이뤄졌다.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방송 4사 타임라인]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 : 22시 23분

	MBC	KBS
		
특보시각	22시 48분	22시 23분
기자 출연	23시 12분	23시 08분
국회 중계차	24시 20분	23시 20분
	SBS	JTBC
		
특보시각	22시 29분	22시 23분
기자 출연	22시 30분	22시 50분
국회 중계차	24시 03분	23시 51분

특보 내용도 문제였다. 야근 도중 급히 앵커석에 앉은 아나운서는 표정에 당황함이 역력했다. 처음 겪은 상황에 적합한 용어를 찾아 사용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였다. 함께 앉은 사회팀 야근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담담히 뉴스를 전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를 얼마나 중대히 위반했고, 유례없는 국헌 문란 사건이란 것을 지적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초기 특보 진행은 대통령의 담화만을 계속해서 반복해 내보내고, 국회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MBC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령 선포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밤 11시 57분 방송된 조국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야, 불법 계엄의 문제점을 확연히 알 수 있었을 정도였다. 특보는

자정을 넘어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타사 대부분 내보내지 않았던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대표들의 입장을 영상과 함께 신속히 전달했고, 시청자들에게 계엄의 부당성을 알려내기 시작했다.

민실위원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특보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일 초기 특보 대응을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항을 사실상 우리가 실행한 셈이라는 자성까지 나왔다.

당시 특보에 참여한 현장 기자들은 “계엄이란 상황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상황 설명이 주가 돼야 할지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았다”며, 기자 개인으로서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기자들의 즉각적 대처가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성 지적에 대한 몇몇 지시가 있었다면 즉각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 “누군가는 법률적 내용을 취재해 특보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실위원들은 저연차의 야근 아나운서와 사회팀 야근 기자에게 초반 특보 1시간 반가량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메인 앵커나 고참 아나운서, 데스크급 이상의 중견 기자를 신속하게 특보에 투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에 대한 초기 판단이 어려웠다면, 관련 전문가들을 급히 섭외해 전화 연결이라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신속히 짚었어야 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범수 뉴스룸 국장은 “대통령실 측에서 대략적인 긴급 담화 발표 시간만 언급했을 뿐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부서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뉴스특보의 방영 결정도 늦어졌다”면서, “특보 시점이 늦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KTV에서 당일 밤 9시 30분 이전부터 긴급 담화 예정 고지를 했던 상황에서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할 사안인지의 판단 자체를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한밤중 대통령실 긴급 담화라는 특이성을 고려하면, 최소한 특보 대비는 들어간 상황에서 담화를 접했어야 했다는 것이 민실위의 판단이다.

재발 방지, 자정 뉴스 신설만으로 충분한가

민실위 지적에 대해 뉴스룸 국장과 아침뉴스 센터장, 정치팀장 등은 대체로 동의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자정 뉴스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범수 국장은 “자정 뉴스의 앵커를 연륜 있는 기자로 배치한다면, 늦은 밤 시간대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정 뉴스를 신설한 것만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특보 사안이 발생했을 시 수뇌부의 보다 빠른 판단

과, 신속한 인력 배치, 적극적인 특보 운영 등이 절실하다.

야근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민실위원은 “현재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야근자가 뉴스룸 내 단 두 명이고, 사회팀 야근에는 입사한 지 2-3년 된 막내급 기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들이 과연 긴급 상황 발생시 곧바로 뉴스특보에 참여하고, 스스로 기사를 출고할 경험과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당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튜디오 진행과 출연, 특보에 참여한 앵커와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특보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위급 사태 시 뉴스룸의 대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민실위는 특보 체제를 재정비하고, 야간 긴급 상황 시 업무분장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뉴스룸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뉴스룸은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더 신중한 뉴스 선택 요구... 선부른 단정, 자극적 표현 지양해야

지난 두 달여, 뉴스룸은 그간의 오랜 뉴스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파했다. 사태 초기 비상계엄을 빠르게 ‘내란’이라 정의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극우’, ‘폭도’라 명확히 규정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에도 기계적 중립, 양적 균형이란 관행에 얽매었던 뉴스룸에서 탈피했다. 민실위는 현시기 뉴스룸이 ‘사회정의와 민주 질서를 옹호한다’는 MBC 방송강령에 맞춰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주동자들과 동조 세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명확히 한 점에 동의를 표한다. 다만, 민실위원들은 일부 리포트나 자막 등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단정적이고 자극적 표현들이 동원되면서, 내란 폭거의 전말을 알리려는 뉴스룸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방송된 [“지적 못 견디고 공감 능력 상실.. 탄핵만이 국민 트라우마 치유”] 리포트가 한 예이다. 민실위원들은 민감한 정신건강 관련 판단을 대면 진료도 없이 몇몇 전문의의 익명 인터뷰에 의존해 보도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서 측은 “취재 초기엔 뉴스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해 기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 인용된 것은 익명의 전문의 2명뿐이었다. 민실위원들은 “설사 리포트를 한다 해도 최소한 실명의 대면 인터뷰는 필요했다”며,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 510명의 시국 선언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12월 13일 방송된 [김어준, '군 암살조' 임무 폭로..“한동훈 사살 뒤 북한 소행 발표”] 리포트에 대해서도 민실위원들은 “김어준 씨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계획’을 ‘폭로’했다고 표현한 것은 과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 김 씨가 받은 제보 내용이 일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지만, 12월 13일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일방의 주장이었던 만큼, 뉴스로 다룬다 해도 표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26일 방송된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리포트에 대해서도 화제가 된 발언은 맞지만, 신부한 사람의 발언을 메인뉴스 리포트 한 꼭지로 할애하는 것이 맞았냐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6일 방송된 [김어준·전 대법원장까지..“미친놈이구나 싶었다”] 리포트의 복대 자막도 문제였다.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은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 전 차장의 발언을 전달한 김 의원의 실제 발언도 ‘미친X’였는데, 편집부는 ‘X’를 ‘놈’으로 단정해 복대 자막을 넣은 것이다.

12월 19일 보도된 [더 참혹했을 그날 밤.. "탱크로 확 밀어" 발언했나] 리포트 역시 ‘팩트’보다는 ‘가정’을 전제로 ‘더 참혹했을 그날 밤’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뽑았다. 해당 기사의 핵심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탱크부대장 구삼희 여단장 진술의 허점을 짚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 말미, 김용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 한 줄로 복대 자막을 뽑고 좌상단 자막까지 <‘탱크’로 밀어버리려 했나?>라고 뽑은 것이다. 복대 자막이나 좌상단의 경우 기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한참 넘은 제목이라고 민실위원들을 판단했다. 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민실위원들은 특히 내란 초기 우리 뉴스 곳곳에 감정적이고 선동적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달라진 앵커멘트, 논평성 기사 증가... 그 선은 어디까지?

이번 내란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자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달라진 앵커멘트일 것이다. 오프닝과 클로징, 각 리포트별 멘트에서도 앵커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안에 대한 평론도 크게 늘었다. 논평 성

격의 리포트도 많아졌다. 이는 박범수 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박 국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기자의 적극적 논평’, ‘우리만의 시각’ 등을 강조해왔다. 박 국장은 “이미 인터넷판 속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스트레이트 보도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대에 뉴스데스크를 데일리 뉴스로 채울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청자들은 직접 현장을 보고 겪은 기자의 분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내란 사태 국면을 두고는 “민주주의와 내란 사이에 중립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며, “팩트만 던지는 나열식 뉴스는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내란을 정치적 대립의 사안으로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자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편집부 차원에서도 앵커멘트에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실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MBC 뉴스룸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일부 표현의 문제보다 내란 세력의 반헌법성을 잘 전달했냐로 평가해야 한다”, “격앙될 만한 사안이다,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로 볼 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평가와 “언론사의 논평은 감정보다 팩트에 기반한 문장으로 정교하게 구성돼야 한다”, “계엄 이후 우리 뉴스에서 느껴지는 태도는 ‘분노’다, 앵커멘트 표현 하나 하나도 정제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실위는 뉴스룸 내부에서 달라진 앵커멘트와 리포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 간의 오랜 관행을 넘어서 시도인 만큼 구성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적극적 논평을 담은 현재의 앵커멘트에 시청자들이 호응하고 있고, 뉴스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핵심은 열린 소통과 합의다. 우리 뉴스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저널리즘 차원에서 리포트와 앵커멘트는 어떠해야 하는지, 수용 가능한 논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앵커멘트나 클로징은 쟁데, 정작 기사 내용은 밋밋하다”, “리포트 내용이 아닌, 앵커멘트로 날을 세우려 하는 것 아닌가”, “논평보다 숨겨진 스트레이트를 발굴해 보도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현장 기자들 평가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내란 사태 초기, 뉴스의 양과 방향성에 비해 질적으로 우리 뉴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지도 깊이 돌아봐야 한다. 논평 역시 팩트와 사안의 진실에 근거하는지 늘 자문해야 한다.

누락된 스트레이트... 상식에 근거한 뉴스 편집 필요

내란 사태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룸의 취재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노상원 수첩’이나 ‘곽종근 옥중노트’, ‘특전사 사전 답사’ 관련 단독 취재는 내란 폭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보도들이었다. 하지만, 내란 보도에 집중하면서, 다른 주요 뉴스들이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지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보도가 대표적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중대한 발언과 행정명령을 연이어 내놨다. ‘김정은 핵보유국’ 발언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까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3분 47초 분량의 특파원 리포트 하나로 이를 소화했다. JTBC가 4꼭지, SBS가 6꼭지, KBS는 9꼭지였다. 타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 당일 하루 종일 뉴스특보를 진행했던 뉴스룸으로서 일관되지 않은 뉴스 판단이었다. 내란 사태 보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날은 트럼프 취임이 미칠 국내적, 국제적 여파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민실위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내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일정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뉴스데스크는 타사와 달리 이 뉴스를 전혀 전하지 않았다. 당일 뉴스데스크에선 ‘현실적 실용주의’를 새해 화두로 던진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2월 6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 역시 누락했다.

“반성할 만한 부분이 있고,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다뤄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후 관련 보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실위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뉴스들이 잇따라 누락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관련 보도는 메인뉴스는 물론, 다음날 뉴스투데이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 역시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고 판단한다. 뉴스룸의 뉴스 판단은 국민적 눈높이,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뉴스는 그 가치만큼 보도돼야 한다. MBC 뉴스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1위로 올라선 것도 결국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뉴스룸은 철저히 국민적 시각에서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뉴스룸 수뇌부의 보다 명확한 스트레이트 판단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관련 보도 비교]

	<p>[KBS] 2꼭지</p> <p>[1] 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 이르면 3월 선고</p> <p>[2] “선거법 위반 심판 검토 중”... 여 “노골적 재판 지연”</p>
	<p>[SBS] 1</p> <p>선거법 2심 다음 달 말 결심... “위헌심판 제청 검토”</p>
	<p>[JTBC] 1꼭지</p> <p>‘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3월 결론... 이재명 측 “위헌심판 제청 검토”</p>

※ MBC는 관련 리포트 미방영

이에 대해 박범수 국장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재판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새로 나왔다거나, 재판 일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메인뉴스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부서에서 제작 의사를 밝혔거나, 편집부에서 제작 요청을 했던 사안도 아니었다”며, “오전과 오후 편집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취임식 보도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